

< 미래 성장력 강화가 시급한 국내 경제 >

참여정부 3년 정책 성과 평가		
	거시 경제 성과	국가경쟁력
평가내용	❖ 거시 경제 성과를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균형성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 IMD,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근간으로 경제, 정부, 기술 인프라, 기업 부문 등 4개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평가
평가방법	❖ 2002년(현 정부 출범이전)과 2005년(참여정부 3년차)의 경제 정책 성과 평가	❖ 2002년 대비 2005년의 국제경쟁력 개선 정도를 분석하고, 국제경쟁력 변화의 주요 원인을 분석

평가 결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경제 여건 및 국가경쟁력 개선 미흡

거시경제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정부 출범 3년차인 2005년의 거시 경제 성과를 국민의 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과 비교해 볼 때, 물가 안정,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안정성 부문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성장력 약화, 수익성 약화, 불균형 심화 등의 특징이 나타남
국가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정부 출범 3년차인 2005년의 국가경쟁력 수준은 국민의 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IMD와 WEF에 따르면, 2005년 국가경쟁력 부문별 평가에서 기술 인프라 부문을 제외한 경제, 기업, 정부 부문이 모두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분석됨 ❖ 특히 정부 부문의 경쟁력은 과중한 정부 부채 부담, 정부의 정책 비전 제시 능력 미흡, 정치 불안 심화, 기업 활동의 용이성 약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정책 과제

- **새로운 정책 비전 제시** : 경제 발전 단계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이고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함
- **사회 안정 도모** : 계층간, 지역간 불필요한 이념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사회 안정을 도모함
- **기업 규제 완화 등** : 과도한 기업 규제 등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개선하여 민간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래 성장력 강화가 시급한 국내 경제

- 참여정부 3년 정책 성과 평가

1. 개요

○ (평가의 틀) 지난 3년간 참여정부의 정책 성과는 경제 성과 측면과 국가 경쟁력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분석 내용 : 경제 성과는 대표성을 지닌 거시 지표를 토대로 성장성, 안정성, 효율성, 균형성 등 4개 부문을, 국가경쟁력 평가는 IMD 및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기준으로 경제 부문, 정부 부문, 기술 인프라 부문, 기업 부문 등 4개 부문을 평가함
- 분석 방법 : 경제 성과와 국가경쟁력 모두 참여정부 출범 직전 년도인 2002년과 현 정부 3년에 해당하는 2005년을 비교 분석함

< 노무현 정부 3년 평가를 위한 분석 내용 및 방법 >

구 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경제 성과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정부의 경제 성과를 성장성, 안정성, 효율성, 균형성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 각 부문 평가는 대표성을 지닌 거시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참여정부 출범 직전)과 2005년 (현 정부 3년차)의 경제 성과를 비교 분석함
국가경쟁력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부문, 정부 부문, 기술 인프라 부문, 기업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 국가경쟁력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전문 평가 기관인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현 정부 출범 직전)과 2005년 (현 정부 3년차)의 국제경쟁력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경쟁력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문의 세부 항목 평가를 수행

2. 경제 성과 평가

(1) 평가 내용 및 기준

○ (평가 내용) 경제성과를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의 전통적인 경제 목표와 함께, 참여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균형성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함

- 전통적 경제 목표 : 경제성과의 영역별 구분을 위하여 우선 경제학에서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일컬어지는 '3마리의 토끼'인 경제 성장, 물가, 국제수지의 3가지 경제 변수를 근간으로 함

- 성장성 : 생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과, 생산에 대한 국내 수요 측면에서의 투자 및 소비(고용)를 고려함
- 안정성 : 대표적 경제 안정성 지표인 물가상승률을 근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정부) 채무/ GDP 비중, 외환보유고/대외 채무 비중을 사용함
- 효율성(수익성) : 수출, 생산과 같은 외형상의 경제성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수지/GDP 비중과 함께 생산성과 수출 채산성을 같이 고려함

- 균형성 : 최근 들어 나타나는 과거 경험하지 못하였던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적 현상이며, 참여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경제 문제인 '경제 양극화'에 대한 개선 여부를 알아 보기위하여 균형성 부문을 추가함

○ (평가 기준) 참여정부 출범 직전 시점인 2002년을 기준으로 참여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지표 변화를 비교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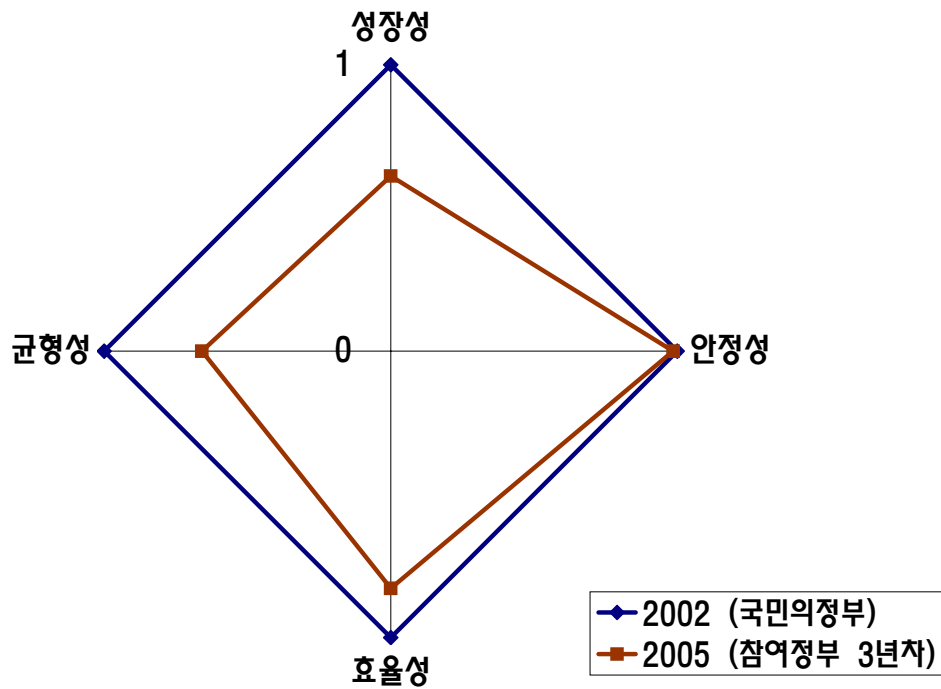
< 경제 성과 평가 내용 및 기준 >

평가 내용		평가 기준
성장성	현재 성장 및 성장잠재력	경제성장률, 설비투자 증가율, 실업률
안정성	경제의 안정성 및 건전성	소비자물가상승률, 정부채무/GDP, 외환보유고/대외채무
효율성	경제의 효율 및 수익성	경상수지/GDP, 제조업생산성증가율, 기업수익성
균형성	경제 부문간 양극화 정도	수출/GDP, 대·중소기업생산증가율 차이, 소득5분위배율

(2) 분석 결과

- 참여 정부 출범 이후 3년차인 2005년의 경제성과를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의 성과와 비교해 볼 때, 성장력 약화, 안정성 유지, 비효율성 증가, 불균형 심화의 특징을 나타냄
- 긍정적 부문 : 참여정부 3년차인 2005년의 경제 안정성 지표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 수준을 유지함
- 부정적 부문 : 그러나 성장성, 효율성, 균형성 부문은 더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특히 효율성보다 성장성과 균형성 부문의 악화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참여정부 3년차의 경제적 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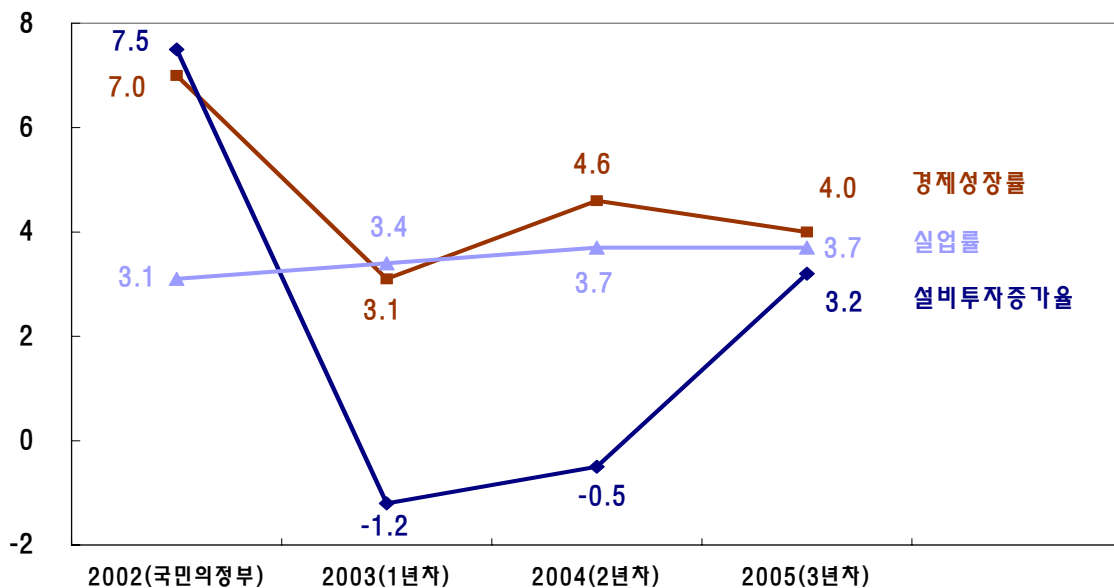
- 주 : 1. 경제적 성과는 각 부문별 지표들의 방향성을 통일시켜, 2002년 수치를 기준치 1로 가정하고 2005년 수치의 변화율을 계산한 이후 각 부문별 평균치를 도출함
2. 따라서 각 부문의 2002년 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문간 변화율에 대한 상대적이고 정량적 비교는 불가능함
3. 다만 성장성 및 균형성 지표의 각 세부 항목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율성 지표의 경우 경상수지/GDP 비중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효율성 부문의 악화 정도가 덜 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성장력 약화)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 지속되어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의 주된 결정 요인인 설비투자마저 부진하여 향후에도 성장률의 빠른 회복이 어려워 보임

- 저성장 지속 : 참여 정부 집권 기간인 2003~20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9%이고, 이 기간 동안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단 한 번도 넘지 못함
 - 2003~05년의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4.0%, 5.1%, 4.3% (E)임 (IMF)
- 고용 시장 침체 :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이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고용 시장 상황도 악화되어, 2002년 3.1%에 불과했던 실업률은 2005년에 3.7%에 이르고 있음
- 성장잠재력 약화 : 무엇보다도 성장잠재력의 핵심인 설비투자의 침체마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제 성장 속도가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005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3년과 2004년의 -1.2% 및 -0.5%의 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 효과가 작용하여 3.2%까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률 수준인 4.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성장성 지표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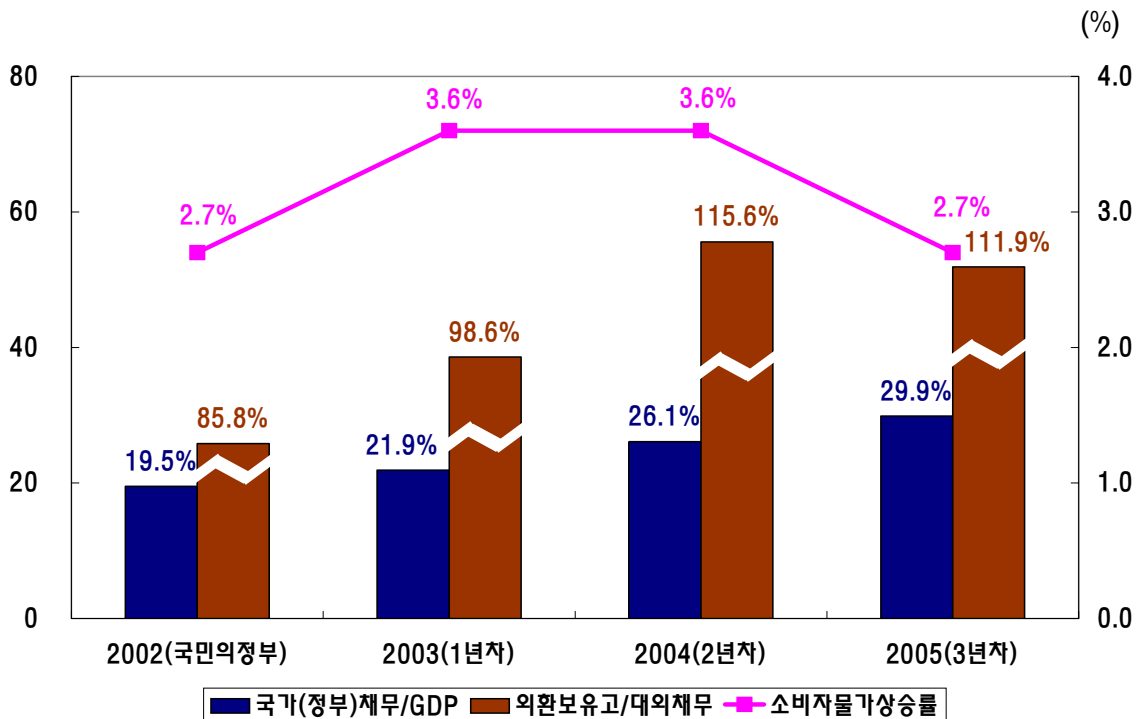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안정성 유지) 대표적 경제 안정성 지표인 물가 수준이 안정되는 가운데,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크게 낮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음

- 물가 안정 : 2002년 2.7%의 물가 상승률이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3.6%까지 올랐으나, 집권 3년차인 2005년에 들어서는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미약하여 2.7%로 크게 안정됨
 - 연평균 원유 도입 단가(배럴당) : 24.3달러(2002년) → 28.7달러(2003년) → 36.2달러(2003년) → 50.6달러(2005년)
- 외환 유동성 양호 : 수출 호조로 대외 거래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대외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85.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에는 111.9%를 차지함
- 재정 건정성 악화 : 안정성 지표 중 유일하게 악화되고 있는 부문이며, 정부 채무/GDP 비중은 국민의 정부 말 19.5%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 21.9%, 2004년 26.1%까지 상승하였으며 2005년에도 약 30% 수준으로 추정됨

< 안정성 지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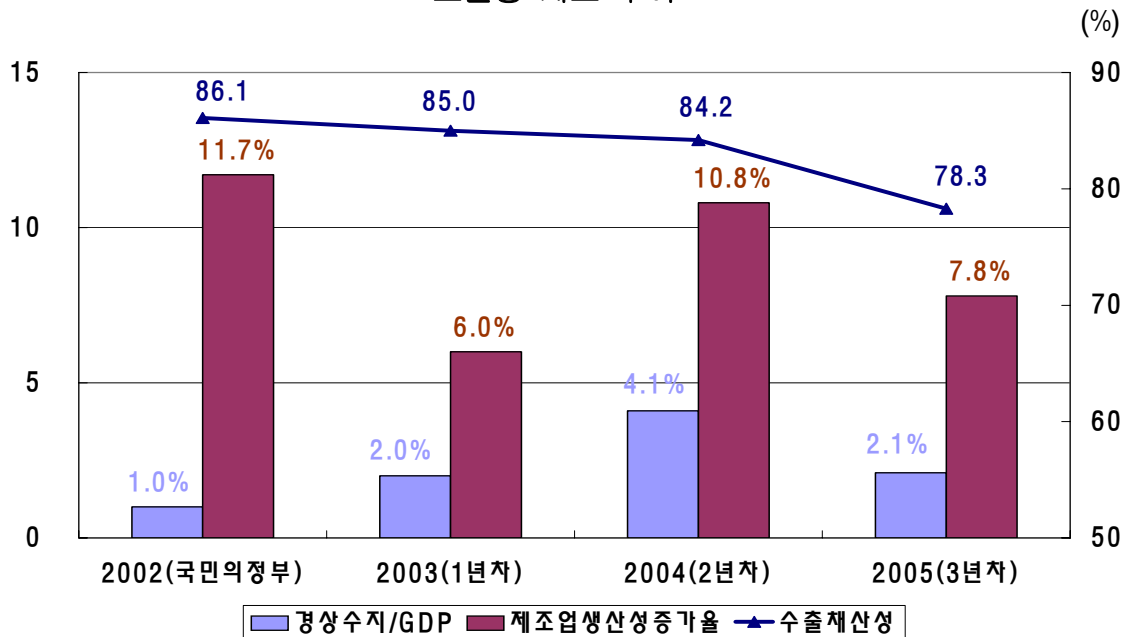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경제 비효율성 증가) 경상수지 흑자폭은 확대되었으나, 생산성 증가율 정체, 수출 기업 채산성 악화 등 대부분의 효율성 지표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 : 경상수지는 2002년에 54억 달러 (GDP의 1.0%)에서 2003년에 2.0% (119억 달러), 2004년에 4.1% (282억 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2005년에 들어 고유가에 따르는 에너지 수입 급증과 서비스 수지의 급격한 악화로 166억 달러 (2.1%)로 하락함
 - 에너지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에 8.1%에 달하고 있음
- 생산성 증가율 정체 :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집권 1년차인 2003년 6.0%에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0.8% 및 7.8%를 기록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전 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의 11.7%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기업 채산성 악화 : 수입 단가 급등에 의한 교역 조건 악화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은 2002년 86.1에서 2005년에 78.3으로 하락함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 95.0 (2002) → 89.0 (2003) → 85.3 (2004) → 79.2 (2005)

< 효율성 지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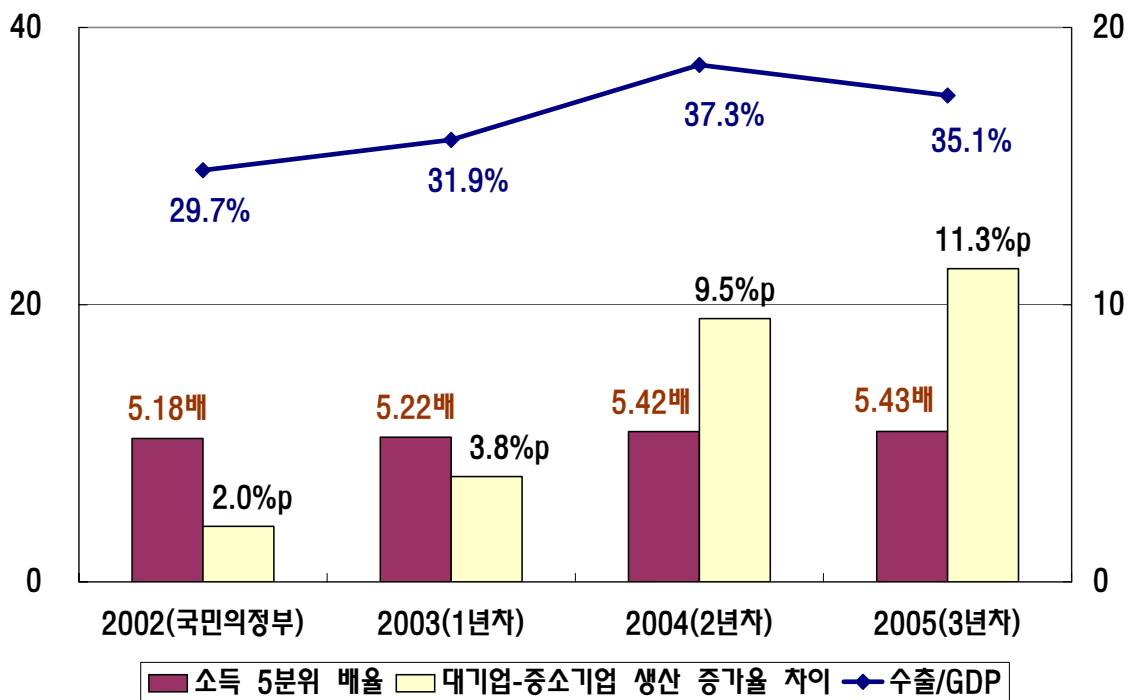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산업자원부, 통계청.

주 : 수출채산성은 해당연도 4/4분기 기준임.

- (불균형 심화) 경제의 수출 의존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 확대, 중소기업 생산 활동의 약화 등 경제의 균형성이 크게 상실됨
 - 경제의 수출 의존성 증가 : 소비 및 투자의 내수 경기가 침체되었으나,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9.7%에서 2005년에 35.1%로 높아짐
 - 소득 격차의 확대 :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이 5.43배로 나타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5.49배를 제외하고는 통계조사가 시작된 1982년 이래 사실상 사상 최악의 소득 격차를 나타냄
 - 대기업-중소기업간 경기 양극화 심화 : 기술 혁신, 세계화에 따르는 부작용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성과가 미약하여, 대기업-중소기업간 생산 증가율 격차는 2002년 2.0%p에서 2005년 11.3%p로 급증함

< 균형성 지표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산업자원부.

< 경제 성과 지표 종합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경제 지표				출범이전	출범1년	출범2년	출범3년	부문별 평가	종합 평가
				2002	2003	2004	2005		
성장성	생산	경제성장률	%	7.0	3.1↘	4.6↗	4.0↘	△	△
	투자	설비투자증가율	%	7.5	-1.2↘	-0.5↗	3.2↗	△	
	고용	실업률	%	3.1	3.4↗	3.7↗	3.7→	△	
안정성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	2.7	3.6↗	3.6 →	2.7↘	□	□
	재정	국가(정부)채무/GDP	%	19.5	21.9↗	26.1↗	29.9↗	△	
	유동성	외환보유고/대외채무	%	85.8	98.6↗	115.6↗	111.9↘	○	
효율성	교역실익	경상수지/GDP	%	1.0	2.0↗	4.1↗	2.1↘	○	△
	생산성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	11.7	6.0↘	10.8↗	7.8↘	△	
	기업실익	수출채산성	p	86.1	85.0↘	84.2↘	78.3↘	△	
균형성	수출의존도	수출/GDP	%	29.7	31.9↗	37.3↗	35.1↘	△	△
	소득 양극화	소득 5분위 배율	배	5.18	5.22↗	5.42↗	5.43↗	△	
	대중소기업 양극화	대기업-중소기업 생산 증가율 격차	%p	2.0	3.8↗	9.5↗	11.3↗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 주: 1. 부문별 평가는 2002년 대비 2005년 지표 수준을 비교 평가한 것이며, 종합 평가는 부문별 평가 값을 산술 평균함 (○는 개선, □는 변화 없음, △는 악화).
 2. 2005년 명목 GDP는 2004년 GDP 778.5조 원을 기준으로 2005년 경제성장률 4.0%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2.7%, 연평균 환율 1,024원을 이용하여 추정된 자료를 사용
 3. 외환보유고/대외채무 비중의 2005년 수치는 상반기말 기준임
 4. 생산성 증가율의 2005년 수치는 1/4~3/4분기 증가율의 평균

3. 국가경쟁력 평가

(1) 평가 기준

-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문 국가경쟁력 평가 기관인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통해 평가함
- IMD와 WEF의 국제경쟁력 지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
 - **IMD** : 한 국가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내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국가의 능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봄
 - IMD 국가경쟁력지수는 경제운영성과, 정부효율, 기업효율, 발전인프라 등 크게 4개 분야의 성과를 측정 및 종합하여 산출됨
 - **WEF** : 지속가능한 성장을 영위하기 위한 국가의 전반적인 제도, 정책 및 제반 여건을 국가경쟁력으로 평가함
 - WEF 국가경쟁력지수는 거시경제환경, 기술력, 정부행정효율, 기업 환경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됨

< IMD 및 WEF 국가 경쟁력 지수 구성 항목 >

구 분	부 문	항 목
IMD	경제운영성과	국내 경제(28개), 국제 무역(20개), 국제 투자(17개), 고용(8개), 물가(4개)로 총 77개 항목
	정부효율	공공재정(11개), 재정정책(15개), 제도적 여건(16개), 기업관련법(20개), 사회적 제반 여건(11개)로 총 73개 항목
	기업효율	생산성·효율성(9개), 노동(21개), 금융(21개), 경영활동(11개), 형태·가치(7개) 등 총 69개 항목
	인프라	기본인프라(22개), 기술인프라(20개), 과학인프라(22개), 보건 및 환경(17개), 교육(14개) 등 총 95개 항목
WEF	거시경제환경	거시경제안정성(8개), 정부당비요소(1개), 국가신용등급(1개) 등 총 10개 항목
	기술력	혁신(6개), 정보통신기술(10개) 등 총 16개 항목
	정부행정효율	계약이행 및 법규준수(4개), 공공기관 부패(3개) 등 총 7개 항목
	기업 환경	기업경영전략 정교화(15개), 국내기업 경영 환경의 질(45개) 등으로 등 60개 항목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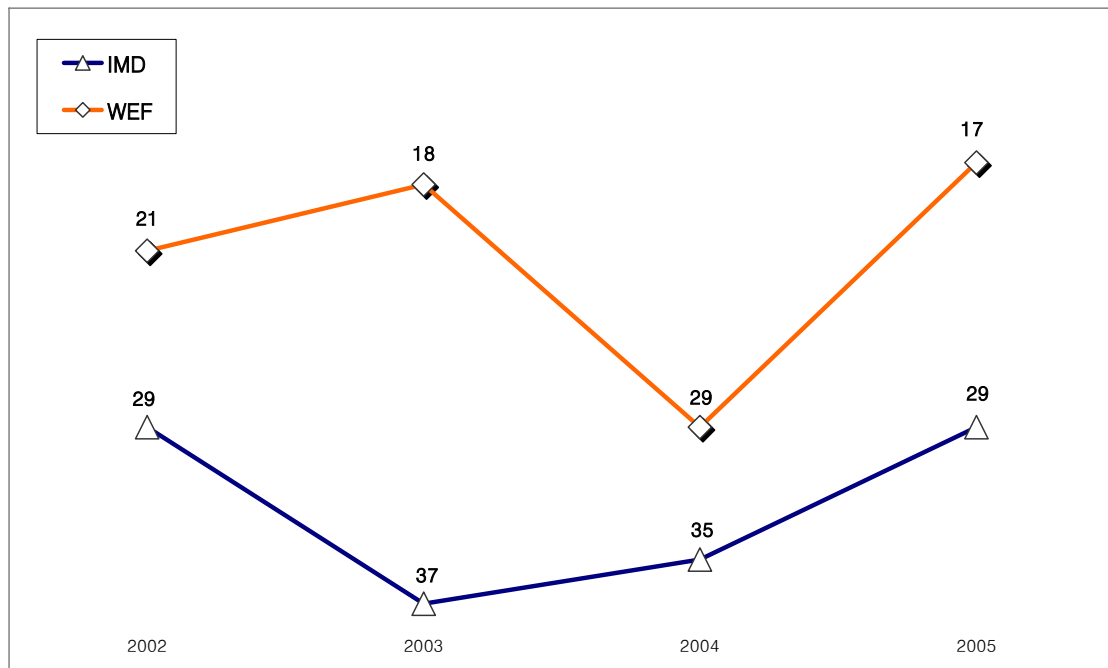
주 : 1) WEF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경제성장잠재력지수(GCI : Growth Competitiveness Index)와 기업경영경쟁력지수(BCI :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으나, 국가별 경쟁력 순위는 경제성장잠재력지수(GCI)로 간주됨

2) 본 지수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경쟁력 지표이나 조사 방법 상 설문 조사 등이 포함되어 주관적 평가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2) 분석 결과

- (총평)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쟁력은 2004년까지 하락 추세를 나타냈으나, 2005년에 들어 상승 반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02년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참여정부 출범 직전 년인 2002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IMD 29위, WEF 21위에서 2004년에는 각각 6단계, 8단계 하락한 35위와 29위를 기록함
- 2005년(참여정부 3년)에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IMD 29위, WEF 17위를 기록하여 2004년에 비해 각각 6단계, 12단계 상승함
-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IMD 29→29, WEF 21→17)

< IMD vs. WEF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 추이 >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02~2005)',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02~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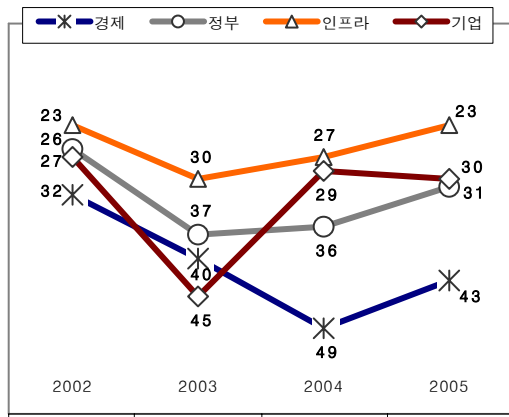
- (부문별 평가) 참여정부 들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순위가 개선되지 못한 것은 경제 여건, 기업 환경, 정부 부문 등의 경쟁력 수준이 정체 또는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① IMD 부문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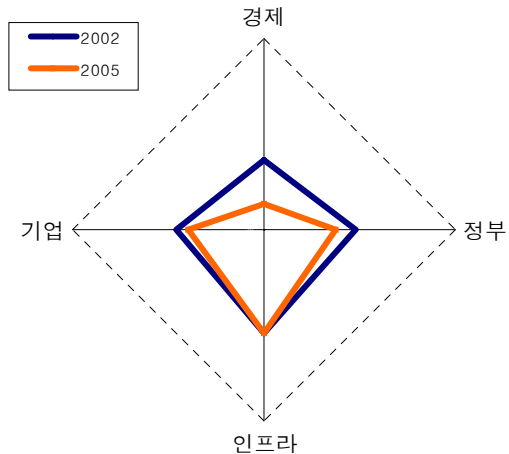
- 추세적 측면 :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경제 부문 경쟁력 하락폭이 두드러지며, 정부 부문 및 기업 여건도 최근의 상승 반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2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경제 부문은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2002년 32위→2005년 43위로 11단계 하락함
 - 같은 기간 정부 부문은 5단계 하락한 31위, 기업 부문은 3단계 하락한 3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인프라 부문도 2005년에 23위로 2002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IMD 국가경쟁력 지수 부문별 순위 >

- 부문별 강약점 비교 -



- 부문별 개선도 비교 (2002 vs 2005) -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02~2005)'.

[참고] IMD 국가경쟁력 지수의 부문별 평가 내용

경제 부문 : 전반적인 경제 운용성과로 거시 경제, 무역, 투자, 고용 등의 지표로 평가됨
 정부 부문 : 정부의 행정 효율성을 평가하는 부문으로 재정, 기업관련 제도 등이 포함됨
 기업 부문 :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의미하며 생산성, 노동, 경영 활동 등으로 구성됨
 인프라 부문 : 사회간접자본, 과학 기술 수준, 교육 등이 포함됨

- **부문별 상대 비교** : 한편 2002년 부문별 평균 경쟁력과 비교한 상대적 경쟁력 수준이 우위에 있던 정부, 기업 부문이 2005년에는 경쟁력 열위 부문으로 분류되어 전체 국가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IMD 국가경쟁력 지수 부문별 평가 >

	2002년	2005년
경쟁력 우위 부문	인프라, 정부, 기업	인프라
경쟁력 열위 부문	경제	정부, 기업,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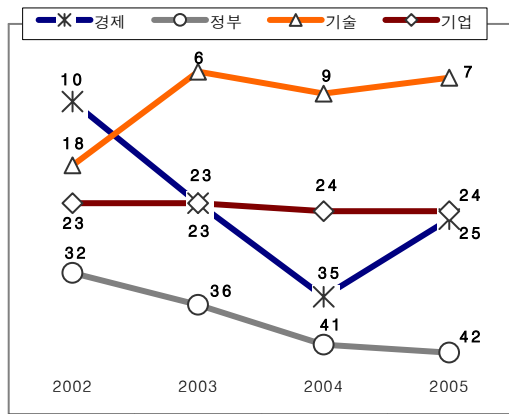
주 : 부문별 경쟁력 우열은 해당 연도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부문은 '경쟁력 우위', 낮은 부문은 '경쟁력 열위'로 구분함.

② WEF 부문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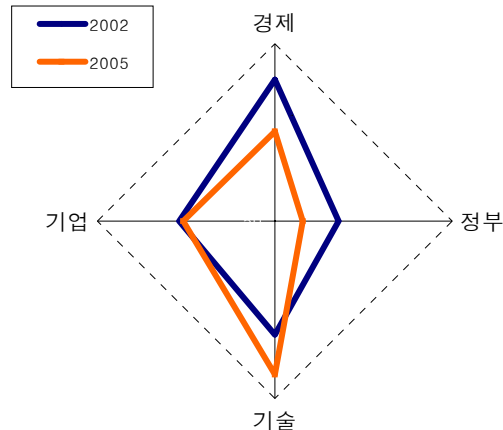
- **추세적 측면** : 기술 부문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반면, 정부 부문의 경쟁력은 하락세가 두드러짐
 - 기술 부문 경쟁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11단계 상승하여 2005년에 7위를 기록함(2002년 18위)
 - 경제 부문은 IMD 평가와 유사하게 2002년 이후 크게 하락하다 2005년에 들어 상승 반전되었고, 기업 부문은 정체 양상을 보임
 - 반면 정부 부문 경쟁력은 2002년 32위→2003년 36위→2004년 41위→2005년 42위로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WEF 국가경쟁력 지수 부문별 순위 >

- 부문별 강약점 분석 -



- 부문별 개선도 비교 (2002 vs 2005) -



자료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02~2005)'.

[참고] WEF 국가경쟁력 지수의 부문별 평가 내용
 경제 부문 : 거시 경제 환경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
 정부 부문 : 공공 기관의 법규 준수, 부패 등을 평가
 기업 부문 : 기업 경영 경쟁력을 의미하며, 기업 경영 선진화 정도, 노사 관계 등을 평가
 기술 부문 :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등을 평가

- **부문별 상대 비교** : 현 정부 출범 직전 부문별 평균 경쟁력과 비교한 상대적 경쟁력 수준이 우위에 있던 경제 부문이 2005년에는 경쟁력 열위 부문으로 분류됨
 - 이에 따라 WEF의 국가경쟁력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소폭 상승한 것은 기술 부문의 경쟁력 향상에 기인하며 정부, 경제, 기업 부문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WEF 국가경쟁력 지수 부문별 평가 >

	2002년	2005년
경쟁력 우위 부문	기술, 경제	기술
경쟁력 열위 부문	정부, 기업	정부, 기업, 경제

주 : 부문별 경쟁력 우열은 해당 연도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부문은 '경쟁력 우위', 낮은 부문은 '경쟁력 열위'로 구분함.

3. 정부 부문 평가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져 국가경쟁력 개선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세부 항목별 분석이 필요함
 - 다만 경제 부문은 앞서 경제 성과 평가에서 분석이 되어 정부 부문의 세부 항목 평가를 통해 국가경쟁력 악화 요인을 분석하도록 함
- (정부 부문 경쟁력 평가) 정부 부문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과중한 정부 부채 부담, 정부의 정책 비전 제시 능력 미흡, 정치 불안 심화, 기업 활동의 용이성 악화 등을 들 수 있음

- IMD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채 급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문의 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됨 (2002년 18위→49위, 31단계 하락)
- 또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黨·政·靑간 잦은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비전 제시 능력이 미흡했던 것도 정부 부문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2002년 52위→32위, 20단계 하락)
- 정치권의 불필요한 이념 논쟁 등에 따른 정치 불안 가중,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정책의 실효성 미흡 등도 정부 부문이 경쟁력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여성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크게 미흡했던 것을 평가됨

< IMD 정부 부문 주요 항목 평가 >

부 문	항 목	2005년 순위	2002년 순위	변동폭
경쟁력 우위	환율 안정성 (2002년 대비 2004년 변동률)	2	6	4
	외환보유고 (금액)	4	5	1
	정부 보조	4	44	40
	이자율 스프레드 (예대 마진)	8	2	-6
	실효세율	13	10	-3
	재정수지	14	14	0
	중앙정부 국내 부채	15	3	-12
경쟁력 열위	정부의 정책 비전 제시 능력	52	32	-20
	정치 불안 위험*	51/60	24/30	-3
	물가 안정	51	44	-7
	기업 활동의 용이성*	45/60	18/27	-5
	중앙정부 총 부채 증가율(실질)	49	18	-31
	이민법	53	33	-20
	여성지위	58	30	-28
	장애인 보호	54/60	28/30	2

주 : 1) 부문별 경쟁력 우열은 IMD의 2005년 부문별 국가경쟁력 평가 대상국 중 상위 49개국의 부문별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부문은 '경쟁력 우위', 낮은 부문은 '경쟁력 열위'로 구분함

2) * 항목은 2005년 조사 항목이 2002년에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2003년 순위를 사용한 항목이며, 2003년의 경우 인구 2천 만명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순위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2003년 순위는 (2003년 순위*2005년 평가국 수)/2003년 평가국 수를 나눈 값을 사용함.

4. 시사점

-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거시 경제 성과 측면에서 성장성 약화, 생산성 정체에 따른 경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었으며, 국가경쟁력도 이전 정부 수준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음
 -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는 안정성을 제외한 성장성, 효율성, 균형성 등이 정체 상태에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는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부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 부문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 단계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 비전 제시, 불필요한 이념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등이 요구됨
 - 새로운 정책 비전 제시 : 향후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경제 발전 단계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함
 - 사회 안정 도모 : 정부의 정책 추진에 앞서 계층간, 지역간 불필요한 이념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사회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업 규제 완화 등 : 과도한 기업 규제 등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요소를 개선하여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HRI**

주 원 연구 위원(3669-4030, juwon@hri.co.kr)

황동원 선임연구원(3669-4181, dhwang@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소상공인 경제 심리 회복세

○ 중소기업청의 1월 소상공인 예상경기 BSI가 101.1을 기록하여 2005년 4월 이후 9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상회함에 따라,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기업가)들이 향후 경기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서비스업, 충청 강원 권을 중심으로 심리 회복세가 빨라짐 - 그러나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체감 경기는 BSI 79.8로 1월에 비해 오히려 1.1p 하락함

- 업종별로는 예상경기 BSI는 교육, 개인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서비스업 분야가 10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지역별로는 행정 도시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청과 강원권의 예상경기 BSI가 109.0로 조사 지역중 가장 높게 나타남

작년의 경우처럼 심리 회복으로만 그칠 가능성도 상존

- 소상공인 BSI마저도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어 경기 회복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12월	1월
경기	경제성장률	4.6	4.0	2.7(0.4)	3.3(1.2)	4.5(1.9)	5.2(1.7)	-	-	
	수요	소비재판매	-0.3	3.7	1.2	3.2	3.8	6.5	9.4	-
		설비투자추계	1.4	3.2	4.0	1.4	0.5	7.3	13.1	-
		건설수주	-5.3	10.6	24.8	40.5	16.7	-17.6	-16.9	-
		수출	31.0	12.2	12.7	9.0	15.4	11.8	11.2	4.3
	공급	산업생산	10.4	6.4	3.8	4.0	6.9	10.6	11.3	-
		취업자수(만명)	2,256	2,286	2,225	2,313	2,303	2,303	2,270	2,247
		실업률(%)	3.7	3.7	4.2	3.7	3.6	3.5	3.5	3.7
		수입	25.5	16.3	14.7	15.1	20.8	14.9	15.6	17.6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282	166	59	26	27	54	5	-
	무역수지(억\$)	294	235	63	61	50	66	16	6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2	3.0	2.3	2.5	2.6	2.8	
	생활물가	4.9	4.1	4.7	4.5	3.4	3.4	3.7	3.8	
심리	소상공인예상경기BSI	65.9	96.9	109.7	83.5	89.6	96.9	96.9	101.1	

주 : 경제성장률 ()안은 전기대비 계절조정 증감률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통계 지표임

□ 금융 동향 : 환율 완만한 상승 국면 진입

○ (해외 금융시장) 美정책금리 인상, 日제로금리 유지 가능성으로 엔화 약세

버냉키 의장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과 일본 제로금리 정책 유지 가능성으로 달러 대비 엔화 약세

- 금리: 신임 버냉키 연준 의장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1월 산업생산의 예상치 하회(전월 0.9%→0.2%, 예상 0.2%) 등으로 소폭 하락 (4.59%→4.53%)
- 환율: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사, 일본 GDP디플레이터의 하락세 지속에 따른 일본 제로금리 정책 유지 예상으로 엔화 약세 (\$/€ : 1.1904→1.1906, ¥/\$: 117.86→118.44)

○ (국내 금융시장) 미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화 약세로 환율 상승세

지나친 원/엔 환율의 하락에 따른 부담으로 원화 약세 뚜렷

- 주가: 미국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증권주 강세 등으로 강보합세 (전주 말 1,335.2→1,340.6)
- 금리: 1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와 미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 소식으로 보합세 (국고채 3년 수익률, 4.85%→4.82%)
- 환율: 위안화 평가 절상 가능성과 수출 네고 출회 등에도 불구하고 미-일 금리격차 확대 예상에 따른 엔화 약세 등으로 환율이 소폭 상승 (전주 말 967.8→974.7)

○ (전망) 지나친 원/엔 환율의 하락에 따른 부담으로 환율 상승세 지속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4	2005				2006	
			1/4	2/4	3/4	4/4	2.10	2.22
국내	거래소 주가	895.9	965.7	1,008.2	1,221.0	1,379.4	1,335.2	1,340.6
	국고채3년(%)	3.28	3.91	4.02	4.60	5.08	4.85	4.82
	원/달러	1,035.1	1,015.5	1,025.4	1,041.1	1,011.6	967.8	974.7
해외	DOW	10,783	10,504	10,275	10,569	10,718	10,919	11,137
	Nikkei	11,489	11,669	11,584	13,574	16,111	16,258	15,990
	미국채10년(%)	4.22	4.48	3.91	4.32	4.39	4.59	4.53
	일국채10년(%)	1.44	1.33	1.17	1.48	1.48	1.61	1.52
	달러/유로	1.3556	1.2964	1.2108	1.2026	1.1849	1.1904	1.1906
	엔/달러	102.56	107.15	110.92	113.51	117.75	117.86	118.44
	두바이(\$/배럴)	33.11	45.91	52.09	56.32	53.19	57.34	57.23